

<제 66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제자유구역청

◆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업무협약



광주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철)은 지난 7일 (사)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에너지기업 투자유치 협력 강화와 광주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큰 축인 2차 전지산업을 광주경제자유구역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국내외 전지산업 정책 동향 공유 ▲전지 산업분야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협력 ▲상호 당사자가 주관하는 국내외 주요 포럼, 전시협력을 통한 지역 전지산업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역량 있는 전문기업 유치 등이다.

광주은행

◆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출시기념 이벤트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출시기념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을 본점에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회원 중 1백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총 5명을 추첨하여 Honors상 2명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골드바, Gold상 3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금호타이어

◆ 광주공장 함평 이전 확정

KUMHO TIRE

All-Ways, Go With you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 광주공장은 전남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부지는 빛그린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50만㎡)으로, 빛그린산단 일원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된다.

공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남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입주시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아 광주공장

◆ 안전한 친환경 일터 구축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최준영, 송호성)은 지난 7일 2022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해 안전한 친환경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래석 기아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서장이 함께해 2022년 안전환경목표 달성을 결의해 임직원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사업장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산

◆ 성암복지문화재단 공로상 · 학자금 수여식



서산(회장 염홍섭) 성암복지문화재단은 지난 11일 2022년도 공로상 및 학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이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25명과 고등학생 11명 등 36명에게 6,10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하고, 2020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광주여대)과 2020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이룬 염혜선(KGC인삼공사)에게 공로상 및 부상금을 지급했다.

염홍섭 성암복지문화재단 이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성암복지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학자금 지원,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체육·예술문화 행사비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총 8억여 원을 지급했다.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전년도에 이어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년 600명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서, 청년·기업(규모에 따른 기업 자부담 비율 상이)·정부가 공동으로 3자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청년층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임금격차 완화 및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청년공제 신청 절차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와 참여를 원하는 기업·청년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 T.062) 654-3428로 문의하면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추진>

본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일부(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로, 광주경총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총 1,077명의 참여자와 470개의 기업에 일경험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체험형 참여기업은 1일 2.2만 원, 인턴형 참여기업은 월 최대 191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www.kua.go.kr)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주경총 노동경제정책 본부(062-654-3426)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경총 박성수 자문위원장_무등일보 1.10일자 아침시평>

임인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아침시평



박성수
미래남도연구원장

4년 전이다. 지난 2018년이 시작되는 이맘때 켜이나 요란했기에 다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바로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고려 현종 9년. 그러니까 서기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전라도'라는 광역행정 구역이 처음 탄생한 해이다. 이로부터 천년 세월을 지나왔기에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 세시도는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면서 대대적인 플랜과 이벤트를 마련한 적이 있다. 그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를 다시 쓰는 야심찬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전라도 천년나무를 시도민 투표로 선정하는 일. 그래서 해남 대흥사 뒤편 두문산 자락에 있는 수령 1,100년의 느티나무가 선택되어 그 위용을 드러냈었다.

바로 잘 자라고 있는 이 거목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 임인년 올해이다. 3월의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2022년이야말로 우리에게 새천년의 전라도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날이 갈수록 낙후되어 가며 지역 불균형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이

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대선공약의 발굴과 선택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번 대선에서 나름대로 굵직한 대선공약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바로 광주형일자리와 한국에너지공대가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지역의 산업지형을 바꿔 남도의 경쟁력을 키워 내는 데 주안을 두면서 지역공약을 만드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린 스마트 팜시티를 지향하면서 보다 크고 강한 광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AI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제2의 광주형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이 빛고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광주형일자리와 성공사례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현재 95%의 우리 고장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터득한 상생의 노하우를 살려 또 하나의 광주형 일자리로 구상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부품산업도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편 전남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의 거점을 만들어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제3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고 동원그림 잠재력 회장의 말처럼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임을 알 수가 있기에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양의 강점을 살려 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전남의 선택은 합당하며, 특히 어느 지역보다 해양에너지 잠재량(121.4GW)이 크므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세계 최대 풍력단지가 조성되

는 산안에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 또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랜드 플랜들은 어디까지나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전제로 동반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공약을 짜야 할 것이다. 시도가 제안하고 있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나 초광역권이 협력하는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시도통합의 길에 큰 걸림돌은 바로 광주 군공함이전의 문제이다. 지금의 기부 대양여방식으로는 이전 후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편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일궈낸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빛가람'이야말로 시도의 상생 고리인 만큼 민선 8기 들어서는 발전기금 등 얹혀 있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을 위해 간곡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시도간의 접점(contact point)을 늘리기 위해 산하기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남도학술, 광주전남갤러리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해서 함께 머리 맞대면 시도간의 상생, 나아가서는 통합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지난해 개최 날짜가 똑같았던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와 전남의 수목비엔날레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다. 또 지난 2008년에는 공동으로 개최한 경합이 있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처럼 올해도 전남방문의 해로 하지 않고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이웃 대구와 경북은 2016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했더니 같이 가는 그들이 부럽기조차 하다.

사무국 일지 (01.10 ~ 01.14)

01.12(수)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온라인(ZOOM) 사업설명

01.14(금) * 제1546회 금요조찬포럼 휴강

Ⅲ. 노사 및 법제동향

1. 노사 동향

■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 주력

○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 27)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1. 10)

-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노력,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 ▲중앙 및 지역 단위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

[참고]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노력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배포 ▲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 개설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확대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구축	▲ 지역거점병원 중심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개입 추진
중앙 및 지역 단위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3차 전원회의 개최(1. 11)

○ 경영계는 1. 1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요구안을 제시

-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 ‘노동조합 활동시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약 21 ~ 24%에 불과하며, ▲노조 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근거로 경영계 요구안을 제시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근로시간면제시간 관련)

조사 항목	사측 응답	노조측 응답
근로시간면제시간	4,255.4H	4,015.5H
노조 활동시간 합계	900.1H(21.2%)	964.0H(24.0%)

※ 노조 활동시간 : 임단협(2년 평균), 노사협의회, 근기법상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조법상 노조관리, 상급단체 활동, 기타 노조활동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근로시간면제시간 관련)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현실화

- i 조합원 1,000인~4,999인 구간을 기존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
- ii 조합원 5,000인 이상 구간을 통합하고 최대 20,000시간 이내로 한도 축소
- iii 근로시간면제 한도 지역분포 가중치 폐지
- iv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20% 축소

②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 노동계는 12차 전원회의(1. 4)에서 ① 현행 10개 구간을 5개 구간으로 통합 및 사용인원 제한규정 폐지, ② 조합원 지역별 분포에 따른 가중치 1,0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③ 교대제 근무 사업장 가중치 부여, ④ 연합단체 전임활동에 대한 노사 합의시 추가 한도 부여, 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보건·산재예방 담당자를 두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예외 인정이 포함된 요구안을 제시

○ 차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14차 전원회의는 1. 18 개최될 예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 11)
 - 동 개정안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비상임이사 1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
-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 표명
 - 경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
 - 또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표명
-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 한국노총, 정치권을 활용한 요구사항 이슈화 지속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 11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 개최
 - ※ 주요 참석자(정의당) 심상정 후보,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등(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등
 -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등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금번 대선이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 심상정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

○ 한편, 한국노총은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임시대의원대회」를 2. 7 ~ 8 개최 예정

- 당초 한국노총은 작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대 대선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2021. 9. 14 개최된「중앙집행위원회」에서「임시대의원대회」연기를 결정

2. 법제 동향

■ 윤준병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7)

- (발의 이유)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 강화와 함께 근로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강화도 필요
- (주요 내용)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점검, 관리토록 하며, 사용자, 근로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 및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개선

■ 이은주 의원(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7)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 그러나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
- (주요 내용)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 추가

■ 신영대 의원(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0)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및 해외 연수 등을 지원토록 규정

-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 대신 중도 퇴사 또는 이직하는 경우가 잦으며,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약 1천 7백만명으로 방대해 정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점 존재
- 또한 현행법상 문화생활이나 국내 및 해외 연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 필요
- (주요 내용)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 박대수 의원(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0)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산업재해 정의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주요 내용) 산업재해의 정의규정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또는 업무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개정

■ 박광온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0)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원받으나,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의 경우 기간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3일로 기간이 짧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이 없는 상태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 정부(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 제출(21.12.30)

- 법무부는 '21. 12. 30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제출함.
 - 제정안은 ▲국가·지자체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국내외 기업활동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지자체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정부, 5년)·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매년)·지역계획(지자체장 등, 매년) 수립·추진실적 평가, 국가인권 정책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 (기업 인권존중책임) 기업은 피해자의 구제요구절차 마련·구제수단 제공 노력,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법령·정책·지침·표준 등 마련
 - ※ 참고로, 독일은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 및 독일기업과 거래하는 직·간접 협력 업체(Supplier)는 스스로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인권침해 여부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유럽 연합(EU)은 「인권실사 의무화법(지침)」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 2023년은 근로자 3천 명 이상, 2024년부터는 1천 명 이상 고용 기업 대상